| 2017. 2.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마련 연구

최 지 현	선임연구위원
이 계 임	선임연구위원
이 용 선	선임연구위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성 명 환	연구위원
황 윤 재	연구위원
박 성 진	부연구위원
김 상 효	부연구위원
최 종 우	부연구위원
이 동 소	연구원
허 성 윤	연구원
한 정 훈	연구원
임 승 주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제2장 신식품정책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3
2. 비전과 주요과제 ····· 5
3. 주요과제별 세부추진사업내용 ····· 8

제3장 분야별 신식품정책 성과 평가

1.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 19
2.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 22
3. 농식품 안전관리기반 구축 ····· 26
4. 농업과 연계 강화 ····· 28
5.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30
6. 외식산업의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 36
7. 국가푸드시스템 체계 확립 ····· 42

제4장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추진과제

1. 추진 필요성 ····· 43
2. 추진 방향 ····· 45
3. 안전·안심 식품공급 ····· 47
4. 건강한 식생활 확산 ····· 58
5. 식품·외식산업의 내실있는 성장 ····· 68
6. 국가푸드시스템의 체계화 ····· 92

표 차 례

제2장

표 2- 1.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의 세부 실천과제 ····· 9
표 2- 2.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의 세부 실천과제 ····· 10
표 2- 3.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의 세부 실천과제 ····· 11
표 2- 4.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의 세부 실천과제 ····· 13
표 2- 5.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의 세부 실천과제 ····· 15
표 2- 6. 외식산업 인프라 및 한식 진흥의 세부 실천과제 ····· 16
표 2- 7. 정책 인프라 확충의 세부 실천과제 ····· 18

제3장

표 3- 1. 음식료품 제조업의 국내산 농식품 이용률 ····· 29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신식품정책의 비전 및 추진과제 ····· 7

제4장

그림 4- 1.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추진방향 ····· 46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국내 식품시장은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확대, 건강·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합리적 소비트렌드 지속 등으로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세계 식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15) 국내식품기업은 글로벌 식품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R&D 투자 부족 등으로 글로벌 식품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미흡함.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식품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접목 영역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등에 대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식품산업 중에서도 4차 산업 혁명은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 위생 상태를 위해 중요한 과정인 유통 관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IT기술을 이용한 식품 공급, 유통,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식품 평가 및 정보 공유가 소비자들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농식품정책 목표의 핵심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상생협력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

○ 식품과 관련한 안전, 영양, 공급, 환경, 산업 부문은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하지만 현재 식품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계획(food plan) 수립 시스템이 부재함. 식품 관련 이슈는 환경적 ·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활동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식품안보, 안전, 영양, 산업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총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안심 먹거리의 공급,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식품산업의 글로벌 성장 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식품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안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건강한 식생활 확산, 식품·외식산업의 글로벌 성장 및 국가 푸드시스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 식품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2장

신식품정책 추진 현황

1. 추진배경

○ UR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업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과 연계 발전 등을 목표로 식품산업 진흥이 농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식품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조직: 식품산업정책단 신설('08), 식품유통정책관실('09), 식품산업정책관실(정책과, 진흥과, 외식과, 수출팀) 개편('11)
- 법률: 식품산업진흥법('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9), 식생활교육지원법('09), 김치산업진흥법('11), 외식산업진흥법('11)

○ 식품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인「식품산업진흥법」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단계 계획((2008~2012년)인 '식품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식 세계화, 식품 R&D, 수출 100억불 등 10여개 대책을 수립함.

- 식품진흥법 제4조에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식품산업종합대책'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가지 못하며, 농

업과의 연계방안이 미흡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하는 2단계 계획(2012~2017년)인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

- 2008년 식품산업종합대책과 비교해 보면 민간투자 확대, 농식품기업지원, 농공상융합형기업 육성 등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기능성식품 시장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 지원정책 등을 새롭게 제시

○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식품산업 정책은 공급 중심의 산업진흥정책으로 국민건강, 식생활, 영양, 식품안전, 식문화 등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정책은 미흡하였음.

- '식품산업종합대책'과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농업과 연계 강화, 식품수출 및 한식세계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식품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포괄하는 新패러다임 구축과 한·중 FTA 등 시장개발 본격화에 따라 수출시장 개척 등 우리 농식품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중 식품미보장 가구 및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중이 전국민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식품원료 중 국산원료 이용비율이 29.7%(2012년 기준)에 불과하고 국산 농산물의 가공이용을 촉진하는 대책과 노력이 미흡하여 식품산업이 농산물 수요처기능을 하도록 실효적인 수단 마련 필요
-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유해물질이나 생산·유통과정상 유해물질의 혼입 등 비의도적이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 개선 요구가 증대
- 식품·외식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정보 제공, 인력양성, R&D

확대 및 규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 필요

2. 비전과 주요과제

○ 新식품정책의 비전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이며, 추진 과제는 ①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②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③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 ④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⑥ 외식산업 인프라 및 한식의 진흥, ⑦ 정책 인프라 확충 등 7개 분야 35개로 구성됨.

○ 국민 식생활 영양 개선은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국민 식생활·영양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홍보강화, 취약계층 영양개선, 로컬푸드·슬로푸드 운동추진,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4개 추진과제와 1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는 인증·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를 목적으로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도입,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 농식품 지리적표시제 관리 강화, 농식품 인증제 개선 등 4개 추진과제와 1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은 농축산물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사전예방관리체계 활성화, 농산물 안전관리 지속강화,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강화 등 4개 추진과제와 11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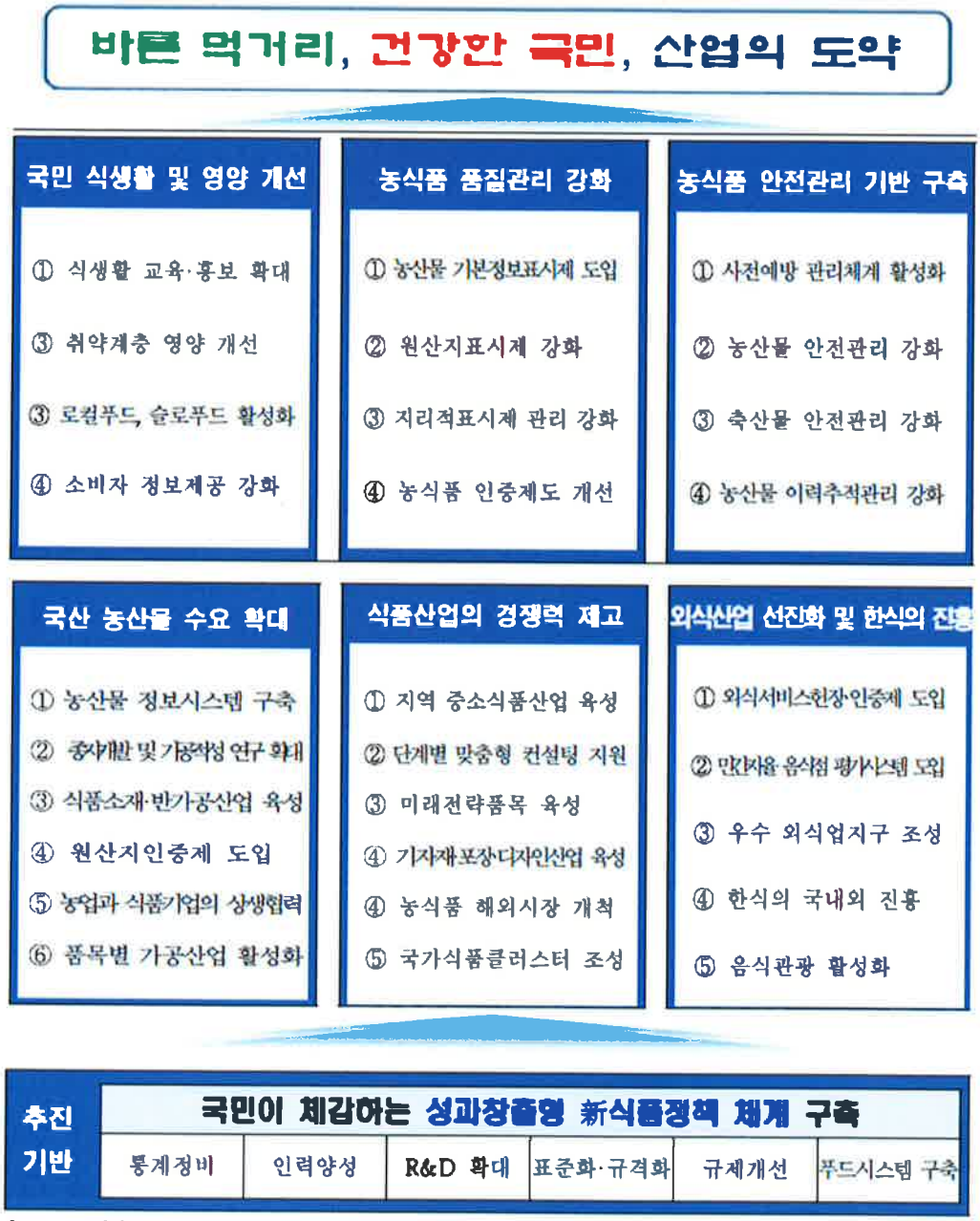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는 식품·외식산업이 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가공용 종자개발 및 가공적성 연구 확대, 식품 소재·반가공·식재료산업 육성, 가공식품·외식업 원산지 인증제 도입, 농업과 식품기업 상생협력 추진,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 등 6개 추진과제와 20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함.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은 신시장 창출을 통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중소식품산업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미래 전략 품목 육성, 식품 기자재·포장 및 디자인 산업 육성,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6개 추진과제와 2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 외식산업 인프라 및 한식의 진흥은 외식산업의 서비스수준 선진화와 한식의 진흥을 목적으로 외식산업 서비스헌장 등 도입, 민간자율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한식의 국내외 진흥, 음식관광 활성화 등 5개 추진과제와 1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 정책 인프라 확충은 통계·정보, 인력양성, R&D, 규제 합리화 등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식품 통계정보 체계 구축, 식품 전문인력 양성, 식품 R&D 확대, 식품 규격과 표준화, 식품규제합리화, 국가푸드시스템체계 확립 등 6개 추진과제와 1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그림 2-1. 신식품정책의 비전 및 추진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신식품정책 추진계획

3. 주요과제별 세부추진사업내용

3.1.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 현장·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 교육기관 및 체험공간 확대, 지도사 민간자격제 도입 및 전문교육연구센터 설립 등 추진
- 소비자, 식생활 전문가,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과 지역별 지원협의체 구성, 바른식생활 5대 캠페인 추진
- 민·관협력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범부처 공통식생활지침 개발(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력) 및 보급 확대

○ 취약계층 영양개선 추진 및 단체급식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 제도 및 농식품지원제도 시범 도입안 마련
- 단체급식의 경우 우수 로컬푸드(친환경, GAP, 지리적표시 등)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침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

○ 소비자 참여형 농식품 종합정보망 구축, 농식품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 발간 등 합리적 영양·소비 정보 제공 활성화

표 2-1.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홍보강화	▪ 학생·직장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비·식생활 대표 슬로건 및 5대 캠페인 추진 ▪ 식생활 정보 도서관 구축 ▪ 식생활 전문교육연구센터 설립 ▪ 공통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 설치 ▪ 한국인을 위한 공통식생활지침 마련 ▪ 표준식생활 홍보 등 범국민 캠페인 추진
취약계층 영양개선	▪ 농식품지원제도 도입 방안 마련 ▪ 농식품 지원 시범사업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법적근거 마련(식품산업진흥법) ▪ 공공분야 단체급식 식재료 구입지침 마련
로컬푸드,슬로푸드 운동추진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분야 단체급식 로컬푸드 우선공급 지침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 '농식품 정보누리' 구축 ▪ 농식품 '인사이드' 제공

3.2.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리 강화

- 표준규격품(현행 80% 수준)외 포장 유통되는 모든 신선 농산물에 대한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 11종의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한국농식품표준제도(KAS)' 도입안 마련
-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콩, 오징어 등), 위반업체 과징금제 도입 등 처벌 강화

표 2-2.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도입	▪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제 도입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 ▪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제 도입 ▪ 표시제 정착을 위한 계도·홍보 실시
농식품 원산지·지리적 표시제 관리 강화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2→3)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콩, 수산물 등) ▪ 과징금 부과제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제도개선 ▪ 원산지 지리제 생산단체 교육 지원 ▪ 지리적 표시제 공익광고, 홍보 다큐멘터리 방영
농식품 인증제 개선	▪ 11종의 농식품 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 ▪ 한국 농식품표준(KAS) 도입방안 마련

3.3.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사전예방적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선도조직 육성, 교육·컨설팅 등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및 HACCP 축산 농가 확대
- 생산단계에서의 재배환경(농지, 용수) 및 투입요소(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축산 부산물 위생기준 마련 및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
- 수출안전 전담 인력(10명 내외) 운용을 통한 수출농가 지원기능 강화

표 2-3. 농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사전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 구비서류 감축, 시설기준 개선 등 개선 ▪ GAP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중소농장 적용 'HACCP 표준모델 개발, 보급
농산물 안전관리 지속 강화	▪ 병원성 미생물, 생물독소 등 신규 위해요소 조사 확대(1.5천건 → 3천건) ▪ 유해물질 작물 전이 가능성 등 감안, 안전기준 설정·변경 ▪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통합 운영(14개소 → 6개소)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 위반율 높은 규제검사 비율 단계적 확대(30%) ▪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매뉴얼(SOP) 개발·보급 ▪ TMR 업체 HACCP 지정확대 및 사료첨가제 인증제 신규도입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강화	▪ 교육·컨설팅 강화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활성화 ▪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이력관리 농산물 홍보 강화

3.4.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농업경영체 DB 등을 활용,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 산지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가공적성·기능성 등에 대한 원료 정보를 식품·외식기업에 제공
- 농산물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간 직거래 활성화 유도

○ 가공용 종자개발 및 가공적성 연구 확대

- 식품·외식기업과 연계, 주요 품목별 품종 보고회(연2회) 및 가공원료 종자개발(쌀, 밀, 콩 등 20개 품목) 방안 수립
- 국내산 농축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소재화·상품화 가공적성 연구 확대

○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인증제 도입
- 원료가 특정 국가산이 95%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품질 국산원료 사용 식품·외식시장 창출

○ 국산 농축산물 이용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
- 농협 가공공장, 산지유통시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산지 및 광역단위 식품소재화센터 육성
- 소재·반가공 관련 연구개발 확대 및 식품기업과의 구매상담회 정기 개최

○ 국산원료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발굴·확산
- 식품·외식기업의 원료 구매수요를 충족하도록 원료 농산물 매칭시스템 구축·운영 및 계약재배 활성화 풍토 조성
- 수급안정용 저장시설 확충,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연계

○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로 수출 촉진 및 수급애로 해소
- 생산액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주요 분야(육가공, 유가공, 쌀, 기타곡물, 인삼, 천일염)에 대한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가공 및 R&D 중심의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 확대
- 전통식품·전통주의 체험·관광산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미래 핵심 전략사업화
- 국산 농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 및 제품화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 실험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표 2-4.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 농업경영체 DB 활용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에 가공용 종자, 가공적성 및 영양 등 정보 추가 연계 ▪ 정보시스템 연계, 농산물 생산자·식품업체 직거래 유도
가공용 종자개발 및 가공적성 연구 확대	▪ 중장기 가공용 종자개발 방안 수립 ▪ 기존 가공적성 연구결과 DB화 및 공개 ▪ 정부-연구기관-식품 기업 간 협의체 추진
식품 소재 반가공, 식재료산업 육성	▪ 주요 권역별 소재·반가공·식재료센터 시범운영(5개소) ▪ 품목별 표준 품질규격 제정·보급 검토
농업과 식품기업 상생협력 추진	▪ 농업과 식품기업 상생협력 사례 발굴 확대(20개) ▪ 식품·외식기업 원료농산물 수요 매칭시스템 구축
가공식품, 외식업 원산지 인증제 도입	▪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 ▪ 원산지 인증제 도입 법령 개정(국회 제출)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	▪ 식육판매업자 대상 교육과정 편성 표준(안) 마련 ▪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목장형유가공 낙농가 확대(55호) ▪ 인삼 관련, 세계보건기구 국제약전 등록 ▪ 국산 농식품소재 기능성 종합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전통식품 명인 체험·전수관 설치(3개소 시범) ▪ 찾아가는 양조장 30개소로 확대

3.5.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 및 지역중소식품산업 육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가 '파일럿 플랜트'로 육성, 식품가공업·마케팅 지원 및 창업 교육 확대
-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지역전략식품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식품기

업 활성화

- 중소식품기업 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및 상품설명회 · 박람회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추진

○ 식품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전략품목(10개) 육성

- 기자재 · 포장재 산업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정보체계 구축 확대
- 중소식품기업 포장 ·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품목별 디자인 풀 구축 · 제공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패키징센터를 식품포장기술 개발 및 컨설팅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유아 · 노인 · 1인가구 · 환자 등 미래 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10개) 개발 및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추진

○ 수출 유망 시장 육성과 신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해외 시장정보 분석을 통해 품목별 ·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매트릭스 도출 및 이에 따른 수출대책 수립
-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전업농 등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제2파프리카로 육성
- 민 · 관합동 문제 해결형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수출개척 T/F(월1회) 운영

○ 글로벌 식품 수출거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3대 식품 R&D 센터(품질안전 · 기능성평가 · 패키징) 구축 및 중국 등 해외수출을 위한 식품전용 부두 등 수출기반 조성 추진
- 산단 및 정주여건 조성, 인력수급 및 금융지원 방안 등 지원방안 마련

표 2-5.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지역중소 식품산업 육성	▪ 소규모 가공업 표준조례 제정 및 보급 ▪ 농업인 공동이용 파일로 플랜트 확대(48개소) ▪ 지역전략식품산업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 농공상 기업 유형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중소식품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수중소업체 대형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한중 FTA 대비, 맞춤형 수출 컨설팅 확대 ▪ '농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 일원화,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컨설팅 지원업무 전문기관 위탁 추진
식품 기자재 · 포장 및 디자인 산업 육성	▪ 식품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우수식품기계 인증제 도입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 패키징센터를 식품포장 중심기관으로 육성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 전문가 컨설팅 지원
미래전략 품목 육성	▪ 미래식품 주도 전략품목 발굴 확대(10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저비용 고부가 생산에 필요한 3대 R&D 센터 구축 ▪ 인력수급 방안, 금융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방안 마련 ▪ 기업 및 연구소 입주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상운영 ▪ 입주기업 수출 One-stop 종합지원체계 구축 · 운영

3.6. 외식산업 인프라 및 한식의 진흥

○ 외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 민간자율 외식서비스헌장 제정 및 서비스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만족도 제고
- 민간기반의 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 향토음식, 로컬푸드, 음식관광 등을 통해 농업과 외식이 연계된 우수외식

업지구 육성

○ 한식의 국내·외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우리 음식의 발굴·표준화 등의 국내 기반정비와 해외확산 병행 추진 및 농업·문화·관광 등의 연계 강화
- '민·관합동 글로벌외식협의체' 및 부처간 '한식정책협의체' 구성, 한식진흥법 제정, 한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등 음식관광 등 인프라 확충

표 2-6. 외식산업 인프라 및 한식 진흥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외식산업 서비스헌장 등 도입	▪ 외식 서비스 헌장 제정 ▪ 민간주도형 외식서비스 인증제 방안 마련 ▪ 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운영
민간자율 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 음식점 평가시스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사업모델 발굴 ▪ 국내외 유사사례 참조, 한국형 사업 모델 발굴 ▪ 음식점 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 외식업지구 자격증 보유업소 비율 등 일부 요건 완화 ▪ 우수외식업지구 성과지표 설정
한식의 국내외 진흥	▪ 한식포털을 '한식 홍보 종합포털'로 업그레이드 ▪ 한식진흥법 제정, 한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전준비 ▪ 국산 식재료 전국지도 및 향토음식 맛지도·달력 보급 ▪ 부처간 '한식정책협의체' 구성
음식관광 활성화	▪ 음식관광 체험식당 확대(115개소) ▪ 궁중음식 체험식당 공모·선정(10개소) ▪ 민관합동 글로벌외식협의체 구성·운영

3.7. 정책 인프라 확충

○ 식품 소비량 통계 신설,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중소식품업체 실태조사 등 수요자 위주 통계 기반 정비

- 원료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통일된 통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 관련 국가표준분류코드 개발

○ 분야별 · 직종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17년까지 식품 · 외식분야 10만명 전문교육 실시

- 푸드테라피스트 등 미래 유망분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재직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확대

○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식품 R&D 지원 확대

- 국산 원료 가공이용 촉진, 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동종업계의 협동 R&D 활성화 유도

○ 단계별(원료→가공→유통→표시→판매→수출 등) 규제 발굴 · 개선 프로세스를 정례화하여 식품 ·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 민 · 관 합동 식품 · 외식규제발굴 T/F 등을 통해 다부처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新식품정책의 이행, 점검·평가 등을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新식품정책협의체' 운영 추진

표 2-7. 정책 인프라 확충의 세부 실천과제

분 야	세부과제
식품 통계정보 체계 구축	▪ 식품소비량 통계 신규 추진 ▪ 식품 통계·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 식품관련 통계·정보 종합포털 구축
식품 전문인력 양성	▪ 식품인력 양성 총괄기관 지정 ▪ 식품산업 분야별·직무 수분별 체계 정비 ▪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식품 R&D 확대	▪ 중소기업 현장애로형 단기·소형과제 실시(신규) ▪ '식품 R&D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기초연구, 산업원천, 제품화 등 단계별 차등 지원 전환
식품 규격과·표준화	▪ 가공식품표준(KS) 품목을 식품공전 95%까지 확대 ▪ 관능 특성 식품 표준화 품목 확대(3개 → 8개) ▪ 한과, 삼계탕, 막걸리 국세식품규격 추진 공청회 실시
식품 규제합리화	▪ 식품·외식규제 합리화를 위한 식품·외식규제발굴T/F 구성·운영
국가 푸드시스템 체계 확립	▪ '신식품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 3 장

분야별 신식품정책 성과 평가

1.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1.1. 주요 성과

1.1.1. 식생활교육

○ 신식품정책에서 식생활교육관련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다양한 식생활교육/캠페인 등이 대체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통식생활지침사업은 완료됨.

○ 식생활 교육기관과 식생활 체험공간의 경우 신식품정책의 목표치에는 약간 못미치지만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시군구 민간추진단체가 빠르게 증가하여 지역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우수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신식품정책 목표: 2017년 250): ('15) 167개소 → ('16) 194
- 식생활교육기관(신식품정책 목표: 2017년 90) : ('15) 55개소 → ('16) 57

- 민간추진단체(시군구) : ('15) 77개 → ('16) 84

○ 전문성을 갖춘 식생활교육활동가의 체계적 육성을 목표로 '식생활교육지도사' 민간자격제가 도입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식생활교육 전문강사가 2016년에 136명이 위촉됨. 체험 현장 중심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상당수 확충됨.

○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유·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추진되고 생애주기 접근이 미흡한 한계를 나타낸 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대상이 확대되고 가정, 학교,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이 성과임.

- 대학생, 농촌지역 고령자, 군대 조리병/민간조리사 대상

○ 범부처(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차원의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제정(2016. 4), 지침 내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추진내용을 다수 포함한 것은 큰 성과임.

○ '바른 밥상, 밝은 100세' 대표 캠페인과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홍보사업이 집중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성과를 거둠.

1.1.2. 취약계층 영양개선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에서 생산자 교류와 지역산 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둠.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생산자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식자재 안전성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

1.2. 미흡한 점

○ '식생활 및 영양 개선' 과제는 신식품정책 초기인 2014년에는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분야 과제로 농정의 9대과제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농정전반에서 해당 위상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2015/2016년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2017년 업무보고에는 미래성장 기반확충과제에 국민영양·건강 증진에 포함되었으나 '어린이·청소년 바른식생활 교육 강화'로 식생활교육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표현하여 교육대상이 축소되어 제시됨.

- 식생활교육 관련 예산은 독립법 예산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며,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기간 중 1.7배 규모로 확대된 것에 비해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예산 증가 속도가 둔화

○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경우 법 제20조 4항에 의거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이 추진, 전 시군구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7년 현재 17개 시·도 제정은 완료되었으나 기초지자체 227개 중에서 32곳에서 제정하여 목표치의 14.1%에 그치는 상황임.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식생활교육지원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정이 추진되지 못함.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정립이 미흡하고, 실무위원회 구성과 식생활교육협의회 운영 등이 마련되지 않음.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표본 구성, 조사문항의 불충분성과 중복성, 조사결과의 활용도 미흡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조사가 추진되지 않아 식생활교육 사업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생산되지 않음.

○ 식생활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목적으로 식생활교육 온·오프라인 전문도서관을 구축하였으나,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활용도와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함. 신식품정책에서 잠정중단된 '식생활교육전문교육센터'에 대한 논의는 제기능과 유관기관 역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설립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임.

○ 식생활교육 대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본격화되지 않고 시범사업 형태 등 지속적 사업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기업과의 협업과 MOU, 육군종합군수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식생활교육의 확산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타부처의 기존 유관사업과의 연계 사업 추진은 다소 부족했던 한계가 있음.

○ 농식품 지원제도는 민관 협업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농촌·도시 고령자 대상 식생활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제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한계를 나타냄.

2. 농식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2.1. 주요 성과

2.1.1.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표시제 도입

○ 포장 농산물에 권장품질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됨(2014년 12월). 이는 관계 부처(식약처)와 협력·협의한 결과물이므로 성과로 판단됨.

○ 생산자 단체, 소비자, 유통업체 대상 관련 교육 진행 시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다가올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토록 한 점 또한 정부 측면에서 정책수요자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 및 배려를 제공한 성과로 판단됨.

2.1.2.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

○ 주요 성과로는 1)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한 점,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대한 점, 3) 재범자에 대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한 점, 4)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점 등임.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2012년 16개 품목에서 2016년 20개로 확대됨.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2순위까지만 표기하던 수준에서 3순위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확대됨.
-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원산지표시법 일부를 개정함(2016년 12월). 형량하한제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 위반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2017년 6월). 벌금 수준이 낮다는 평가

를 반영하여 법적제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2.1.3.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 관리 강화

○ 지리적표시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자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 선진지 조사,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제품의 품질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 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 홈쇼핑 홍보 프로모션 등 다양한 홍보/정보제공 활동을 수행함. 이는 지리적표시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지불의향에 영향을 주어 지리적표시제품의 거래/구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2.2. 미흡한 점(당면과제)

○ '포장 농산물 기본정보 표시도입' 사업의 경우 2014년 12월 국회파행 이후 2015년 및 2016년 법령 정비 추진이 미흡하였음. 이에 따라 포장 농산물 권장품질에 대한 표시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미흡한 점이자 당면과제로 판단됨. 2017년에는 법률 개정을 재추진하고 표시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대상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 사업의 경우 1)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로 인한 사회후생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었으므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또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5배 이하)가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벌금수준이나 처벌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처벌방안을 모색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함. 게임이론 및 법경제학(Law Economics) 접근법을 활용하여 단속확률, 위반확률, 벌금수준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도 있음.

○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 관리 강화' 사업의 경우 추진 계획 상에 나와 있는 주부/지자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가 추진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지 못한 점 또한 한계점으로 판단됨. 해외 선진사례 조사 내용 등이 생산자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또한 의문이며, 품질관리 강화 활동이 수행되었으나 품질관리 강화를 확인·관찰할 수 있는 어떤 지표도 개발·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품질관리,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 인증제 개선' 사업의 경우 첫째, 11종에서 6종으로 통합하려던 시도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이며, 향후 6종으로 통합하려는 최초 계획을 고수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통합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는 인증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한국농식품표준(KAS)제도의 도입은 유기인증을 제외한 모든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것인데, KAS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안전 특성, 품질 특성, 지리적 특성, 제조인 특성까지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농식품 안전관리기반 구축

3.1. 주요성과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요구 증가로 인해 GAP 도입이 확대되고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농산물 GAP 인증농가비율은 6.8%에 달함.

- 농가: ('14) 46.3천명 → ('15) 53.6 → ('16) 73.9 (전체대비 6.8%)
- 면적: ('14) 58.7천ha → ('15) 65.4 → ('16) 87.4 (전체대비 5.2%)

○ 축산물은 농산물 못지않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시행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생산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식육의 잔류 물질 검사 대상을 위해도와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등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TMR 업체의 HACCP 지정 확대 등의 사업도 시행 중

○ 농산물 안전관리는 우리나라 식품 안전/안심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주로 잔류 농약에 대한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위해물질들에 대한 관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부적합 비율은 1%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는 농식품 안전 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데, GAP 정책사업과 병행하여 진행 중

임.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이력추척관리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이력관리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3.2. 미흡한점(당면과제)

○ 신식품정책 발표 당시보다는 GAP 농산물의 비중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기반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완벽하게 정착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GAP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등과 같이 산지 농가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정책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농장의 HACCP 인증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업체의 반납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예년 수준의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조사물량 확대 위주의 안전관리로는 농가 안전의식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시료 수거 및 분석 업무 과중으로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 다소 소홀함.

- 조사물량(천 건): ('12) 80 → ('13) 87 → ('14) 91 → ('15) 90
- 부적합비율(%): ('12) 1.5 → ('13) 1.4 → ('14) 1.3 → ('15) 1.4
- 안전성조사 1인당 시료수거 건수는 '04년 220건에서 '15년 816건으로 대폭 증가

○ 이력추적관리등록 내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소비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낮고 가격 차별화가 없어 GAP 인증을 받거나 유통업체 등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등록이 대부분을 차지함.

- 생산자: ('13) 103.2천명 → ('14) 98.8 → ('15) 61.9 → ('16) 31.2
- 유통자: ('13) 980건 → ('14) 859 → ('15) 476 → ('16) 322
- 판매자: ('13) 710건 → ('14) 705 → ('15) 125 → ('16) 111

4. 농업과 연계 강화

4.1. 주요 성과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내 '원료농산물 생산자정보' 서비스 오픈하여 원료 생산자 관련 정보와 가공적성 정보 등을 통합 제공

- 식품기업이 품목별, 지역별 생산정보 파악이 가능
- 제품개발 단계에서 원재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목별 성분, 가격, 가공적성 정보 등을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

○ 농업과 식품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농업계와 기업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력 사례 증가

- 상생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기업 응답비율: ('15) 68.8% → ('16) 88.6
- 상생협력 유형: (14) 4개 분야 → ('15) 9 → ('16) 11
- 협약체결 기업(CJ, SPC, 농심)의 국산농산물 구매액은 17~34% 증가

○ 2014년 금액기준 음식료품 제조업에 투입된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의 국내산 비율은 각각 60.5% 및 48.0%로 추정됨(서울대, 2016).

- 이는 일반적인 투입계수를 이용할 경우의 국내산 농림수산품 이용률 76.2% 및 국내산 음식료품 이용률 67.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원

재료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 투입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산 이용률은 더욱 낮게 나타남.)

○ 2013년과 비교하여 음식료품제조업의 국내산 이용률은 농림수산품의 경우 58.5%에서 2%p 증가하였으며 음식료품의 경우 46.2%에서 1.8%p 증가함.
- 이는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

표 3-1. 음식료품 제조업의 국내산 농식품 이용률

연도	산업 구분	전체투입계수	국내산 투입계수	
			보정전(%)	보정후(%)
2013	농림수산품	0.22295	0.16858(75.6%)	0.13036(58.5%)
	음식료품	0.22419	0.15003(66.9%)	0.10356(46.2%)
2014	농림수산품	0.21687	0.16515(76.2%)	0.13124(60.5%)
	음식료품	0.22125	0.15003(67.8%)	0.10609(48.0%)

4.2. 미흡한 점(당면과제)

○ 국내산 농산물 이용률이 증가해 식품산업의 농업과의 연계가 다소 강화되었으나, 물량 기준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 식품제조업체의 2014년 물량 기준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중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데 그침 (aT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2016).
- 국내산 원료 이용률: ('12) 29.7% → ('13) 31.2 → ('14) 31.3

5.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5.1. 주요 성과

5.1.1. 지역중소식품산업 육성

○ 145개 지자체에서 소규모 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을 완료함(2016년 6월 기준).
- 대상 지자체(도시지역 제외) 145곳 중 143곳, 추가 수요(도시지역) 2곳 등 총 145곳에서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완료

○ 농업인 공동이용 파일럿 플랜트는 28개소('14~'16년)가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창업 235농가, 지식재산권 168건(특허 55건, 상표 113건),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209건(상품화 178건, 추진 중 31건) 등의 성과를 거둠.

○ 지역식품산업 신규사업단으로 2014년 10개, 2015년 4개 사업단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선정사업단 매출액 증가: '14년 5억 원 → '15년 27억 원 → '16년 97억 원
- 사업단 가공 시설 운영인력 등 지역 일자리 창출: '14년 22명 → '15년 46명 → '16년 78명

○ 중소식품기업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우수기업을 2014년 300개소, 2015년 321개소, 2016년 356개소를 지정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24개사)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융자 지원('16년 22개소), 박람회 참가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 1,2호점 개점

○ 중소기업간 협력과 조직화를 유도하고자 중소식품기업 간 협력지원 활성화 과제를 2014~2016년 기간 동안 총 44개 과제, 88.9억 원을 지원함.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제품개발, 공동마케팅을 통해 매출액이 58억 원 증가함.
- ('14) 19개, 39억 원 → ('15) 16개, 36억 원 → ('16) 9개, 13.9억 원

5.1.2.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컨설팅을 2015년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함.
- 해외진출 기업 1개소, 내수확대 기업 2개소 컨설팅 지원

○ 농수산식품 기업지원 업무의 일원화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기업애로상담센터에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하고, 식품외식기업 원스탑(One 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2016년 기준 총 2,934건 애로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등)서비스 제공

○ 컨설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 관리 위탁을 추진함. 전문기관의 컨설팅사 관리 및 등급평가를 통해 컨설팅사 전문성 검증 및 중간점검 등 사업 효율을 제고함.
- 지원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성과 지속관리 및 컨설팅 성과 분석 활용

5.1.3. 미래 전략 품목 육성

○ 미래 식품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적극 육성하고자 식품 R&D 중장기 계획('15~'19) 수립하여 미래전략 품목을 선정함.

- 지역특화 식품, 질병·계층맞춤식(만성질환 개선식품, 실버푸드 등), 사회변화대응형 식품(곤충식품, 1인가구식, 프리미엄 식품 등)을 미래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R&D 집중 투자

5.1.4. 식품 기자재 · 포장 및 디자인 산업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인프라 구축 및 기관 이전으로 기업지원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 8월에 식품패키징 센터를 준공함. 투자 관심기업 대상 기술(R&D)지원을 통해 분양체결 3건, 외투임대 1건, 연구소 유치 1건 등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

- 분양체결(BTC, 네오크레마, 제너럴네이처), 외투임대(코아바이오), 연구소(바이텍)

5.1.5.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 2016년 수출액은 64억 7천만 달러로 2010년 40억 8천만 달러 대비 58.8%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61억 1천만 달러 대비 5.9% 증가함.

- 2016년 수출액은 2006년 33억 9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90.0%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음

○ 농식품 수출시장 다양화와 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등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정보 조사와 유망품목의 시장진출여건 조사를 확대하여 정보를 제공함
- 중국 시장의 경우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시설을 건립함
- 시장 잠재성이 높은 이란 시장 개척을 위해 상담회 등 마케팅 전개
- 샤인머스캣(ShineMuskat) 포도, 발아현미쌀 등 신규유망상품 발굴 및 시범수출

○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확대 유도를 위해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에 대하여 수출 물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정함

○ FTA 체결국이 증가하고 관세가 하락함에 따라 국제 교역국들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2016.7., 제9차)
-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17개국 70개 현지 전문기관(법무, 통관, 라벨등록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출업체의 비관세 장벽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중국 시장에 대해 쌀 · 김치 · 삼계탕 등의 품목에 대해 對中國 검역조건 협상이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해짐

5.1.6.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대 R&D 센터(기능성평가, 품질안전, 패키징)를 구축하고, 기업 대상으로 총 26건의 기술지원을 제공함.
-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18건의 기업기술지원 수행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인력 및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임직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취업설명회 개최, 취업박람회 참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내 금융지원 등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농림축산식품사업 내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거양
- 수출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중국 바이어 알선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업·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유치를 확대함.
- 3개 공구로 분할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1공구(39만㎡)는 조성공사 완료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료확보, 인력조달, 물류·유통, 수출지원(마케팅·브랜드화 포함) 등 추진방안을 마련함.
-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을 위한 기업협력 환경 조성
  • 생산 및 수출 전문과정 개설하여 분양·입주기업 등 임직원 64명 교육
  • 분양체결 기업 인력수급 지원을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
  • 취업박람회에 입주기업 전용 채용관 개설
-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구축
  • aT의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을 활용,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원료 농산물 구매정보를 제공
  • 기업과 구직자 쌍방에 필요한 통합인력 중개서비스 실시

5.2. 미흡한 점(당면과제)

○ 신식품정책에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던 과제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완료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세부 추진과제 중에서 '식품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우수식품기계 인증제 도입'은 유사한 제도인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가 기 시행되고 있어 인증제 도입의 실효성이 낮아 미 추진됨.
- 추진 과제 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과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 및 조성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들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정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전략 품목 육성'과제는 미래식품 주도 전략품목 발굴에 초점을 두

고 추진됨. 미래 전략 품목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과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역중소 식품산업 육성' 과제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최근 수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경향임.

- 2014년 이후 수출액은 61억 달러~ 6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세 완화
- 수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전후방 산업과의 패키지 수출, 상호 연계성 및 순환구조가 미흡한 편임.

○ WTO/DDA 협상('15, 케냐 나이로비) 결과에 의해 2024년부터 농업부문 수출보조금 지원이 폐지될 예정임. 하지만,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출이 가능한 간접지원사업과 수출지원체계 수립은 미흡한 실정임.

- 물류비 폐지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체 지원사업 발굴 필요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시 주요 애로요인은 수출시장 수요자 정보, 유통채널, 검역 및 통관 등의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점임. 그러나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aT KATI에서 수출시장 정보를 제공하지 있지만 농식품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양한 소비자계층 및 선호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주체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실정

○ 농식품 수출 대상국과 수출품목이 일부 국가 및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수출시장 및 품목에서 수출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조임.

- 주요 수출국인 일본, 중국, 미국 3개 시장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2015년

50.5%, 2016년에는 45.9%를 차지

· 일본의 반한감정(김치, 막걸리), 중국 정부의 반부패정책(인삼, 심비디움) 등으로 수출 급감

- 수출품목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가진 주력상품이 부족한 실정

· 2015년 농림축산식품 상위 10개 수출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 중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한 품목은 인삼이 유일하며, 궐련, 음료, 커피조제품,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

○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비관세조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임.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 수출개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출개척시장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외식산업의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6.1. 주요성과

6.1.1. 외식

○ '新식품정책'의 일환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한 과제가 추진됨.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외식업지구'지정을 추진하여 2015년 현재 19개소를 지정하였고, 식재료 산지페어, 국제 식자재박람회 등 농업과 외식의 만남의 장 마련 및 외식식자재 전문 사이버몰 운영으로 식재료 직거래를 강화하였음.

- '12년 5개소 → '13년 4개소 → '14년 4개소 → '15년 6개소
- 우수외식지구의 연평균('12~'15) 매출액 14.5%,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용 57.9% 증가
- 식재료 공동구매 성과 외에 지자체 사업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환경개선, 지역봉사활동추진 등 다양한 모범 사례 발굴
- 식재료 산지페어: '13년 2회 25억 → '14년 8회 105억 → '15년 9회 127억 → '16년 9회 146.5억 원의 직거래 성과
- 국제 식자재박람회: '12년 117억 → '13년 137억 → '14년 159억 → '15년 348억(해외 170억 포함) → '16년 163억 원의 상담 성과
- 외식식자재 전문 사이버몰: '16년 119억, 회원 수(구매 7,041, 소매178), 거래건수 1,929건 성과

○ 또한 외식산업 부문의 통계·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외식업 경기지수의 국가통계승인, 다양한 조사 수행을 통한 통계 콘텐츠 확장을 추진하였고, 외식정보포털 "The 외식" 오픈 및 외식관련 전망대회 개최, 식재료 총서 발간을 통한 국내산 식재료 DB구축 및 온라인 홍보 확대 및 필수정보 발간 등 정보접근성을 강화함.

- '11년 2/4분기부터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고, '16년 5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작성 승인
- '12년 국내외 외식트렌드 → '13년 식재료 구매현황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현황 조사 → '15년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등 지속 추진
- '15년 6월 외식정보포털 "The 외식" 오픈, '15년 12월 외식소비트렌드 전망대회, '16년 11월 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 '13년 8도 식재총서 → '14년 식재의 재발견 → '15년 식재총람
- 법률, 세금, 지원제도 등 3개 분야 경영가이드 북 제작·배포

○ 현장중심의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국내산 식재료 수출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조직화를 추진함.

- '14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aT, Kotra, 외식업계 및 학계 등으로 협의체 구성
- '15년 5개 분야(인력양성, 정보제공, 법률·금융지원, 홍보, 지원체계 구축) 29개 과제 발굴·수행 및 해외진출 실무 메뉴얼(MAPS) 발간
- 해외진출 외식기업 커뮤니티 'G-Bridge(71개사)' 구축하고, 식재료(소스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인증 및 등록비 지원
- 국내산 식재료 수출현황: '14년 247억 → '15년 327억 → '16년 340억 원

6.1.2. 한식

○ '新식품정책'의 일환으로 한식의 국내외 진흥과 음식관광 활성화(문화부 협업)를 위한 과제가 추진됨. 한식의 국내외 진흥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한식홍보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한식 관련 최신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국산 식재료 전국지도'와 '향토음식 맛 지도'를 제작·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식재료 및 음식 홍보를 추진하였음.

- '한식홍보종합포털'이 기존에 한식당 · 조리법 등을 단순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동영상 · 향토음식자원 정보제공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됨. 한식포털(www.hansik.org) 방문자 수는 2014년 51만 명에서 2016년 6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국산 식재료 전국지도'를 품목별로 제공하고, 향토음식 맛 지도를 제작하여 건강한食원정대를 활용하여 보급하였으며, 한식 홍보를 위한 달력을 제작하여 2016년 해외한식당협의체에 1,600부를 배포함.

○ 또한 한식정책과 문화·관광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간 '한식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한식정책을 추진함.

- '한식정책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

책을 수립·추진함.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한식문화관 조성(2016년 4월), 음식관광코스 K-푸드로드 개발(2016년, 10개), '코리아코메' 등의 행사를 활용한 홍보(2016년 10월, 월드한식페스티벌 개최) 등이 추진됨.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자재를 기반으로 한 음식관광 체험식당 확대의 일환으로 농가맛집을 조성하고, 궁중음식 체험식당을 선정함.

- 농가맛집이 2013년 83개소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117개소에 달함. 농가맛집을 통해 발굴·개발된 향토음식이 151건(2015년)이며, 자가생산 59.3%, 지역산 32.5% 비중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등 농가맛집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상당부분 기여함.
- 궁중음식 체험식당을 2016년까지 10개소를 선정하고, 국·영문본 궁중음식 레시피 보급(2015년 6월), 궁중음식 체험 홍보(제2회 궁중문화축전, 2016년 4-5월; 대장금과 함께하는 경복궁 별빛야행, 2016년 9월)를 추진하는 등 궁중음식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이밖에 '新식품정책'의 일환으로 한식진흥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에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장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법률 제정과, 세계유산 등재라는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함.

-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재추진이 필요하며, 2016년 한식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부처 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 문화' 등록을 위해 문체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임.

6.2. 미흡한 점(당면과제)

6.2.1. 외식

○ '新식품정책'에서 외식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리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부족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나 장기적·지속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수외식업지구 사업예산의 미반영 및 엄격한 선정기준, 예산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 신규시장 및 외식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발 부족 등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정책개발이 미흡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저해
- 외식산업 육성 및 체질강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제·개정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영세성과 경영 불안정으로 인한 높은 창·폐업은 사회 문제로 확산
- 식재료 산지페어, 국제 식자재박람회, 식재료 총서 발간 등 국내산 식재료 사용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 외식산업과 농업과의 실질적 연계 확대 노력 미흡

○ 또한 외식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국가 경제 활동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주력 외식소비계층으로 성장하면서 푸드테크(Food Tech)가 빠르게 외식산업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외식서비스 다양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푸드테크 개발 및 활용 확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6.2.2. 한식

○ '新식품정책'에서 한식의 국내외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과제들은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완료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新식품정책'에서 한식의 국내외 진흥과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과제들이 콘텐츠 구축 · 보급 및 홍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농가 맛집 조성, 궁중음식 체험식당 선정 등 국내 한식 진흥과 연관된 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이에 비해 한식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해외 한식 진흥과 구체적 ·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식당의 해외 시장 진입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왔으나, 폭 넓은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한식 저변 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한식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해외 한식당의 수준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향후 식품정책에서는 한식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해외 한식당의 경우 소규모 · 영세성, 한인 중심 사업 운영 등으로 품질 · 서비스 등에서 현지 외국인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지 식당과 비교하여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됨.
- 한식에 대한 브랜드 인식 · 인지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며, 브랜드 가치가 기업 경영과 연계되어 일관되게 적용 ·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7. 국가푸드시스템 체계 확립

7.1. 주요성과

○ 국가푸드시스템 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신식품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과제가 추진됨. 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신식품정책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각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음.

-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신식품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2015.12)

7.2. 미흡한 점(당면과제)

○ 신식품정책을 점검·평가의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국가의 전반적인 푸드시스템 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계획(food plan) 수립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함.

- 식품안전·영양, 식품 환경 및 산업 등 관련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산업 발전을 통괄하는 국가푸드시스템의 구축 필요

제4장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추진과제

1. 추진필요성

1.1. 식품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국내 식품시장은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확대, 건강·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합리적 소비트렌드 지속 등으로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세계 식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식품기업은 글로벌 식품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미흡함.
-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7% 미만
- 한·중 FTA효과 활용한 중국시장 공략 미흡(수입식품시장 한국비중 1%미만)

○ 국내 식품기업은 글로벌 식품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R&D 투자 부족으로 인해 기술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0.7%, 제조업(3%)의 1/4 수준
- 국내 식품 기술수준은 최고 선진국 대비 78.4% 수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7)

1.2.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 수립 필요

○ 식품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글로벌화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식품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접목 영역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등에 대응한 정책 지원 필요
- 농식품정책 목표의 핵심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는 상생협력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
- 한식세계화의 획기적인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한식·외식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체계적 추진 필요

1.3. 국가식품정책의 통합적 관리필요성 증대

○ 최근 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 경제·사회에 식품관련 이슈의 부정적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자연재난 빈도 증가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비만, 각종 성인병 초래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으로 간편 제품 소비 증가
-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식품 위기발생으로 수급불안 및 소비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 증가

○ 식품관련 안전, 영양, 공급, 환경, 산업 부문은 높은 상호 연관성과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 식품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계획(food plan) 수립 시스템이 부재함.

- 식품 관련 이슈는 환경적 ·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활동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
- 식품관련 문제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푸드체인, 생산은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별 부처에서 분산 관리
  - 식품산업진흥(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관리(보건복지부), 급식(국방부, 교육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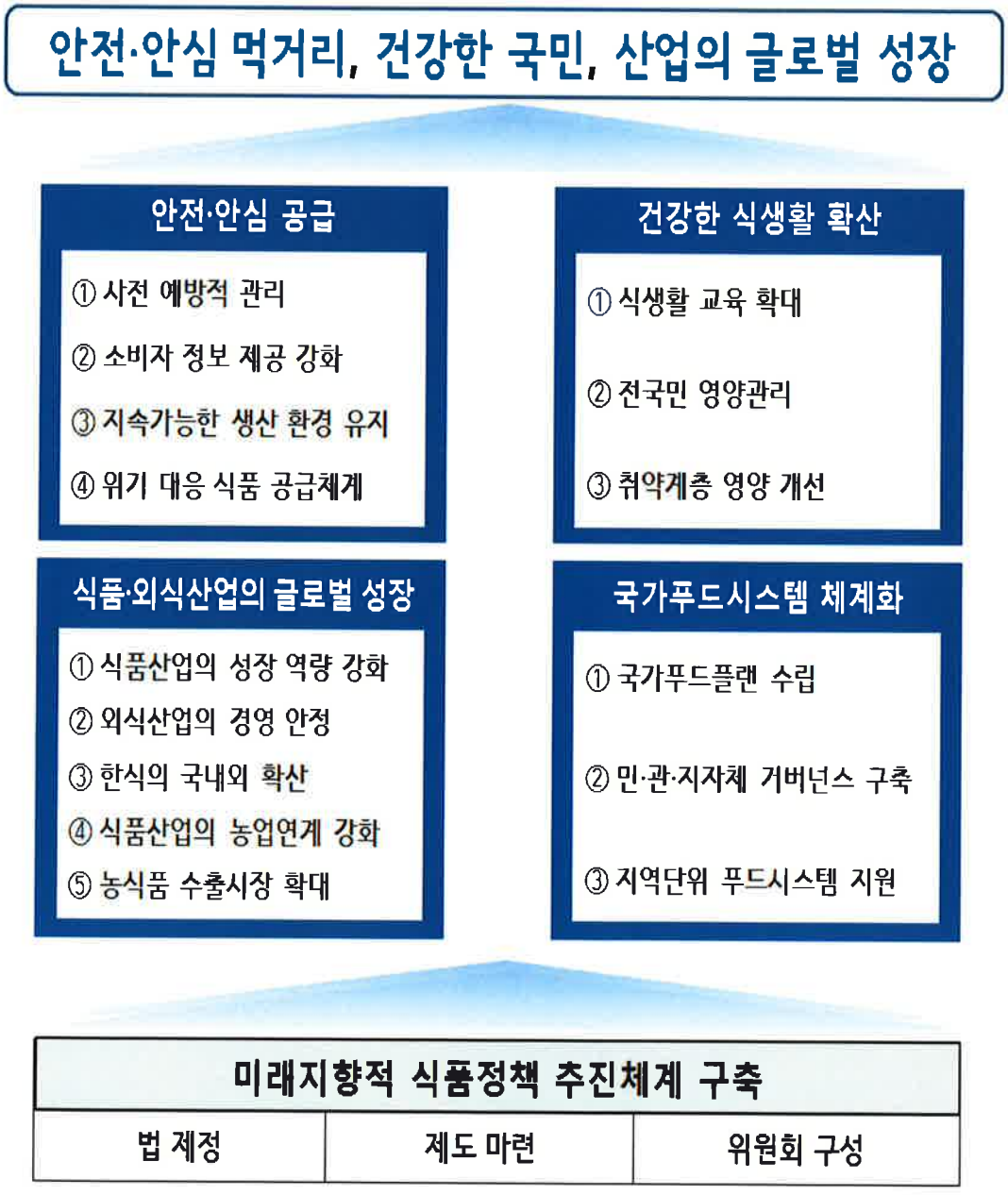
○ 국가차원에서 식품안보, 안전, 영양, 산업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미래지향적 식품정책의 새로운 비전은 " 안전·안심 먹거리, 건강한 국민, 식품산업의 글로벌 성장" , 4대 핵심과제는 안전·안심 공급, 건강한 식생활 확산, 식품·외식산업의 글로벌 성장, 그리고 국가푸드시스템의 체계화로 설정함.

- 안전·안심공급: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소비자정보제공 강화,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형 식품공급체계 구축
- 건강한 식생활확산: 식생활교육 확대, 국민영양관리, 취약계층 영양개선
- 식품·외식산업의 글로벌 성장: 식품산업의 성장역량 강화, 외식산업의 경영 안정, 한식의 국내외 확산, 식품산업의 농업연계 강화, 농식품수출시장의 확대
- 국가푸드시스템 체계화: 국가플랜 수립, 거버넌스체계 구축, 지역푸드시스템 지원

그림 4-1.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추진방향



3. 안전·안심 식품공급

3.1.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3.1.1. 기존과제의 개선

○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기술지도 강화를 통한 생산 주체의 역량 강화로 예방적 방제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GAP 기준을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군별 GAP 기준으로 개편하여 GAP 생산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 생산자 조직의 집단인증제 도입 등으로 인증을 활성화
- 단체급식 및 사이버거래 등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GAP 인증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 축산물 HACCP을 도축장이외에 농장단계와 가공장, 판매점 등 모든 단계로 도입을 점차 확대
- 농장 및 중소형 사업체 대상 HACCP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
- 2022년까지 HACCP 농장 적용비율을 현재 34.3%에서 50%까지 확대

○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음. 다만, 최근 식품 안전 이슈에 따라 중금속, 방사능,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해 물질 작물 전이 가능성 등 안전기준에 대한 설정·변경이 필요함.

○ 교육 및 컨설팅 강화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이력관리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음. 특히, 이력 추적 기반 확대와 이력관리제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3.1.2. 신규추진과제

○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안전관리 대상인 생산자 조직을 자율적인 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분석실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역으로 현장에서 수집된 시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통합 분석실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어 인근 지역의 대학이나 전문 분석 기관과 업무협정 등을 맺어 협업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현장 모니터링 및 단속에 민간 단체를 활용해오고 있는데,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안전 관리의 시작이 생산자가 되어야 하기에 역량이 되는 생산자 조직을 선별하여 1차적인 자가 관리 및 위해 요인 발견 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등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농업인 대상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실시

○ 농축산관련 안전 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력추적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력추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가축동향조사의 이력정보 대체에 따른 이력추적 통계 시스템 확충
-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이력추적관리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
- 이력관리 농축산물의 홍보 강화
- 농축산물 이력관리 정보 확인 범위를 유통과정 정보로 확대

3.2.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3.2.1. 기존과제의 개선

가. 식생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의 정보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정보의 생산 및 제공이 필요함.
- 농식품 안전 및 품질정보의 생산·제공 비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식생활정보의 경우는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해당 정보가 풍부하게 생산·제공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안전 및 품질정보의 제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가격, 안전, 구입요령, 구매처, 인증표시, 생산 등과 관련 있는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홈페이지 정보 탐색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선택정보의 경우 정보탐색 1단계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정보 제공, 일반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 위주의 정보제공 등은 지양하되, 그림과 동영상 등을 통한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를 생산 및 제공

○ 식품안전정보 제공 사이트 내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한 Q&A 활성화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소비자가 위험 관련 전문가와 토의하거나 질문할 기회가 없으며, 식품위해는 보통의 감각으로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위해의 수용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음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농식품 소비자정보 제공 필요

○ 정보전달 채널 간 연계 및 다각화가 필요함.

- 농식품 정보제공망의 핵심 컨텐츠를 포털사이트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의 농식품정보 구독처 1위는 포털사이트(71.1%)이므로 기존의 농식품 정보제공망의 컨텐츠 일부를 전략적으로 특화시켜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동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나.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

○ 원산지표시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실제 표시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계절적 · 시기적으로 집중·다소비되는 품목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 추진하고, 굴비 등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품목 등 주요 위반 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소비자보고채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구입 거래 주체인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원산지표시 관련 불법유통을 적발하기 용이하므로,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정보 활용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위변조 주요 품목별 원산지 식별요령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소비자의 식생활에서 원산지 표시가 포괄하는 영역 비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법사업자 처벌·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제, 형량하한제, 의무교육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거짓표시 처벌규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대부분 2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된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던 바,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법행위 처분내용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시정명령, 거래행위금지 등 처분내용 공표의 효과 확산이 필요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리감독기관의 홈페이지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연동 또한 필요함. 소비자의 이용 편이성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가 시장에 의해 제재되도록 조치 필요

다. 농식품 인증제 개선

○ 농식품 관련 인증제품의 일괄 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식품 소비자정보의 총체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보를 쉽게 취득·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인증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가 농식품 구매 시 인증을 활용하지 않는 가장 주한 이유는 인증제도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임.

○ 표시/인증제 적용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지도와 이해도는 신뢰도의 선행요인이므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인지도와 이해도 증진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언론보도 및 광고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소비자주권을 증대하는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음. 학교 소비자교육 수업내용에 식품안전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표시인증제 적용 농축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표시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등 일반소매 유통사와 민-관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대형 할인점 내에서 소비자들이 표시인증제

적용 농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분된 코너 및 매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농식품 소비정보제공사업 및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정보 컨텐츠 개발사업

○ 정부는 '농식품 정보누리', '농식품 소비공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소비자 정보수요 파악/반영 미흡, 일방향적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지향성이 미진하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도가 낮음
- 민간/개인이 생산하는 농식품 소비 관련 정보와 차별성 부족
-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판별도 어려워 신뢰도가 낮음
- 정보제공 채널이 다원화되어 있어 관련 정보의 '원스탑 쇼핑'이 어려움
- 농식품 소비자의 정보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매일 확인하는 '일상정보(동네 농식품 가격비교 정보 등)' 생산이 미흡한 실정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구 집단별로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식품 소비정보제공사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정보 컨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정보제공사업은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정보와 차별적이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비자 지향적 정보를 꾸준히 생산할 필요성이 있음

3.2.2. 신규추진과제

가. 농식품 표시/인증제도 우선순위 평가 및 민간이양/폐지 추진

○ 농식품 관련 표시/인증제도가 너무 많아(13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소비자 1천 명 중 744명은 농식품 표시/인증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7) .

○ 일부 인증제도는 홍보 부족 및 생산자 호응 저조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는 2012년 도입 후 2016년 말까지 총 114건만 인증된 수준임.

○ 인지도/실적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관리/홍보해야 하는 표시/인증 영역을 선택/집중하여 정보품질 및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홍보해야 하는 표시/인증 속성은 '안전성 속성(80.93점)', '원산지 속성(80.25점)', '품질 속성(74.65점)', '친환경 속성(71.3점)', '특정 생산자/생산지역/산업 속성(71.93점)'순 임(농림축산식품부, 2017.3.; 소비자 1,000명 대상 조사).

○ 따라서, 국가가 직접 관리할 당위성이 분명한 '중점 표시/인증제도'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함
  - 소비자는 안전성 속성, 원산지 속성, 품질 속성, 친환경 속성 순으로 국가가 관리할 당위성이 있다고 평가

○ 국가가 추진할 당위성이 떨어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을 인증/표시하는 제도는 점진적으로 민간단체(협회 등)에 이양 혹은 폐지를 추진(식품명인, 지리적 표시제 등)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적이 부족하고 개선 가능성이 낮은 표시/인증은 과감하게 폐지를 추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표시/인증제도의 효율적 관리에 집중해야 함.

3.3.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유지

3.3.1.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기능 강화

○ 적정시비를 위한 토양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작물에 대해서 토양검정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적정시비를 지도하는 한편 전국 읍·면·동별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비료공급 정책지원을 강화함.
  - 작물별 비료사용기준 설정과 토양검정기반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인증시스템과 연계)

○ 종전과 같이 토양비옥도, 중금속, 수질, 비료사용 등 농업환경자원의 주기적 변동성을 조사·평가하는 농업환경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농업환경 가치 재정립

○ 향후 농업환경보전기술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 추진
  - 농업환경변동조사 연계 지표 측정 및 분석체계 구축
  - 농경지토양 중금속분석자료 공유(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GAP 인증 활용)
  - 비료사용처방 기준 다양화 및 활용 확대로 적정시비 유도

3.3.2. 농업용수 수질개선

○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수질을 차등화고, 최근 수질경향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대상지구를 재선정하며, 유해 우려 호소 수질을 모니터링을 강화함. 호소 상류지역 오염원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며, 홍수면 부지 내 영농제한으로 농경배수로 인한 오염을 줄임.

○ 수질개선 완료지구 모니터링 및 환류를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 개발과 매뉴얼화하여 수질정화 효율을 제고함. 수질개선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절차의 간소화, 시행기간의 단축 및 예산절감을 도모함. 저수지 준설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물 제거를 연계하여 저수용량을 확대하고, 수질개선을 동시에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함.

○ 시·군주도로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농림·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호소 수질개선대책을 지역단위로 수립하는 등 역할을 강화함.

○ 오염신고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 자발적 수질관리환경 감시에 기초한 유역 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와 환경보전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홍보를 활성화함. 홍수기(6~8월) 전에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유발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4. 위기대비 식품공급체계 구축

3.4.1. 식량자급률 향상

○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쌀 이외 맥류와 두류 등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여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용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함. 현재 추진 중 인 '답리작 활성화 추진계획'은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답리작 면적 : ('12) 206천ha → ('15) 236 → ('16P) 287 → ('20P) 379

○ 논의 타 작물 재배 및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한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우수 품종개발 · 보급 강화 및 공동경영체 육성 확대, 밭 농업 기계화 촉진,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등을 통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식량자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

3.4.2. 이상기후에 대응한 자연관리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수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고온, 병해충, 질병 등에 대한 적응과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 유입이 우려되는 식물병해충 및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방제·방역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국가 농작물 병해충관리시스템 운영, 외래병해충 예찰체계 보강 및 새로운 문제 병해충 방제 기술 지속 개발·보급, 신종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방기법 개발·보급
- 온실 등의 내재해 설계기준 마련 및 첨단온실, 스마트 팜 등 보급 확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대응력 강화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8～'2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18～'22),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6～'25) 계획 등 산림보호지역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천연보호구역(독도·한라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유전자원 서식지외 보전체계 구축 및 국내외 식물자원 보존·저장시설 운

영, 국가수목원 및 아시아 거점 종자은행 확충

○ 수원 함양을 위해 활엽수 조림면적 확대, 댐유역 숲가꾸기, 산림관리기법 고도화 등의 산림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찰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수목진료체계 구축, 위성·항공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

○ 산불·산사태방지를 위해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불 예측 및 산불 발생지 이력관리, 산사태 조기감지장비를 설치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DB를 구축함.

3.4.3.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지원

○ 농작물 및 가축 재해 시 보상을 통해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폭설 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농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보험 대상품목은 2015년 50개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입률이 저조한 일부품목은 상품 개선 또는 일몰제 도입 검토

○ 과수의 경우 적과 전 종합위험 보장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버섯재배사도 원예시설과 같이 연중판매로 판매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 들녘경영체, 농업인단체, 주산지 농협 등 주산지 및 전업농위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상품설명 및 홍보를 강화함.
- '17년 상품개선 사항이 많은 품목에 대해 현장간담·설명회 확대 실시
- 지역농협담당자, 지자체공무원들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타 사업보조 대상 선정 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우대를 통해 가입률 제고

○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재보험기금 운영 안정화를 도모함.
- 일정손해율 초과시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초과손해율)에서 국가와 민간 사업자가 이익·손해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손익분담)으로 전환 추진

4. 건강한 식생활 확산

4.1. 식생활교육 확대

4.1.1. 기존 과제의 개선

가. 맞춤형 식생활교육 강화

○ 영·유아, 어린이,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확대함.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영유아 식생활교육을 전국적 규모로 확산하고, 어린이 대상 식습관 학교 운영을 확대함. 교사(예비교사) 및 학부모 대상 식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식생활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생산자(농림어업자, 식품가공업자, 외식사업자 등)와 유통사업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식생활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푸드체인 주체들의 식생활교육에서 역할을 강화함.
- 생산자는 식생활교육 추진 시 소비자에게 건강을 고려한 상품과 메뉴의 제공, 음식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나 지식의 제공,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제공
- 유통사업자는 슈퍼마켓 등에서 농림어업자 등과 연계 하에 강습회 등 교육활동 개최, 조리방법·식단 레시피 정보 제공, 농림어업자와 소비자의

교류 등을 지원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어린이 과일 제공사업 등) 등의 영양·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식생활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함.

나. 식생활교육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주체 확대

○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표시제도 및 식생활 정책 등 관련 사업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함. 나아가 부처 간 식생활, 영양, 건강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참여주체를 확대함.

○ 지역 단위 사업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민간단체/기업체 참여를 유도함.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공장·점포 견학, 제조·조리 체험, 농림어업 체험, 요리교실 개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식생활교육 활동을 추진함. 참여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업 상품수요 확대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

○ 농업 및 전통 식생활과 연계한 우수식체험공간을 확대하고, 식생활/영양 교육 공통 교재 및 교구를 개발·보급함.
-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상시 실습·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지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 홍보를 통해 활성화 추진
-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등과 협업하여 식생활교육 교구·교재 개발보급

○ 식생활·영양교육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을 확대하고, 시·군·구 민간추진단체

운영을 확산함.

○ 식생활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함.
- 온·오프라인 식생활교육 전문도서관에 대한 홍보, 농식품정보누리 및 식생활 관련 타 사이트와의 연동 확대, 이용자 접근도와 활용도 제고

라.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바른 밥상, 밝은 100세' 대표 캠페인과 5대 실천과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매체로 대상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지속적 홍보를 추진함.
- 20~30대 이하 젊은 세대 대상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홍보매체를 통해 성과 제고
- 지자체 공통의 자율사업으로 대표 캠페인 및 5대 실천과제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전개

○ 매주 수요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업으로 가족밥상문화형성 공동 캠페인을 실시함. 가족문화형성 캠페인은 가족 밥상의 날과 가족사랑의 날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 슬로건 및 캠페인송 제작, 우수 식체험공간 개방, 방송홍보 등을 통해 전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함.

4.1.2. 신규 추진과제

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전통 식문화와 연계한 식문화 실천 지원

□ 사업(정책) 필요성

○ 우리나라 식문화는 유구한 역사와 사계절의 다양한 식재료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행사나 관습에 결부되어 형성되어 왔으며, 한국형 식문화는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균형 잡힌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 우수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전통 식문화가 한국형 식생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접하고 자발적인 실천에 기반하여 전통 식문화를 발전시키도록 추진함.

□ 사업(정책) 내용

○ 지역·전통 식문화 관련 활동을 촉진하여 전통적인 식문화·지역의 향토·전통 요리의 소개와 체험 등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가맛집' 지원 프로그램 등 전국 및 지역에서 전통 식문화 및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교실 확대

○ 주부 및 가족 대상 전통음식 체험을 위한 요리교실 등을 실시함. 다양한 행사에서는 조리사협회와 연계하여 요리기술을 갖춘 전문조리사의 활용을 도모함.

○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향토음식과 연계한 식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급식과 연계한 급식 조리법(Recipe) 선정 대회 및 콘테스트 등을 개최함. 전국 학교급식 담당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 식문화 및 절기음식교실'을 확대함.

○ 전통 발효식품 우수성·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체험관, 식문화 가이드 북/리플릿, 향토음식 맛지도, 홈페이지, 매스컴, SNS 등)를 활용함.
- 한식의 우수성·기능성 관련 연구 지원 및 연구결과의 해외 저명 학술지 게재 등을 추진하여 언론매체에 홍보

- 국제행사,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활용 한식 우수성 홍보 사업 추진

나.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정책) 필요성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운영성과를 점검·환류시키기 위해 식생활교육의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지역 및 민간의 식생활교육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사업(정책) 내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함.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보고양식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매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추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가칭)'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년 조사된 식생활 실태조사와 지역/단체별 추진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3~5회 개최하고 매년 말 평가보고서를 작성

○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정량적 성과지표를 보강함.

4.2. 전국민 영양관리

□ 사업(정책) 필요성

○ 안전 관리 통합을 목적으로 식약처 승격 이후 식약처에서 유통단계 및 소비단계 사업 확장으로 중앙부처간 업무 중복이 일부 존재하며,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가 함께 담당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규정 조항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 식품 공급에 관한 정책이 불충분하게 규정됨.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개별법 등도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관련되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법률조항이 분명하게 포함되지 못함.

○ 현행 식품영양과 식생활 관련 정책이 부족하며, 식문화차원에서의 접근이나 농업과의 연계를 감안한 식생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사업(정책) 내용

○ 식생활 및 영양정책의 위상 정립과 정책 확대를 위한 조직기반과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식품산업 진흥, 식품관련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므로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은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임.

○ 건강 식생활을 위한 식생활·영양 프로그램을 통합 추진하여 예산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민에게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식생활·영양 정보 등 정책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국민영양관리에 바람직한 식품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
- 지역사회 식품환경 정보 제공
- 한국인을 위한 공통식생활지침 반영 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제공
- 식품 소비 및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웹기반 평가 도구 제공

○ 식생활·영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식품, 영양, 건강에 관한 정보창구 일원화로 국가 식품·영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소비 행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함. 그 밖에 식생활·영양 관련 통계 확충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4.3. 취약계층 영양 개선

4.3.1. 기존 과제의 개선

○ 농촌노인대상 시범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촌 고령자의 경우 독거노인 비중이 높고 거동이 불편하여 조리에 어려우므로 농촌노인 공동밥상 형태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함.
- 독거노인의 경우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30% 수준
-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업으로 운동, 건강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

4.3.2. 신규 추진과제

가. 농식품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확대

□ **사업(정책) 필요성**

○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지원사업의 경우 농산물조달실태를 알 수 없고 수혜자의 품질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준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자체/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정책) 내용**

○ 생산 및 유통단계 농산물 조달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 지원 및 공공급식 대상 효율적 농산물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유통센터, 농협유통센터 등을 통해 국내 농산물 조달체계를 활용하여 이를 거점으로 학교급식, 복지시설 등에 농식품 지원함.

-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근거조항 추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조건 개정

○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리 농식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정부 비축 농산물, 수급조정 대상 농산물, 생산자단체/유통업체 기부 농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함.

나. 어린이 미각형성과 편식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 신선 과일채소 간식 지원(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사업(정책) 필요성

○ 어린이 식생활은 성인 식습관으로 직결되어 영양섭취와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 대상 식생활교육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어린이·청소년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유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

○ 어린이는 음식의 식감이나 맛에 대한 기호가 결정되는 시기로 어린 시기부터 과일·채소 등 다양한 음식의 맛을 경험해 보고 놀이와 체험 등의 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필요함.

○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식생활 유발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은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치가 어려워 의료자원 소모 및 노동생산성 감소, 삶의 질 저하 등 경제적 파급영향이 큼. 경제적으로도 예방 차원의 식생활 관리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임.

□ 사업(정책) 내용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과일·채소 간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과 과일·채소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함.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달 농산물을 선정하고 학교, 기관 등에서 해당 농산물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과일바구니사업에 과일·채소 조달체계 지원, 어린이집/학교 대상 사업 확대

○ 어린이 미각 형성과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습관 교육, 캠페인과 병행 실시함.

- EU에서 'School Fruit and Vegetables Scheme'과 'School Milk Scheme' 운영, 미국에서도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시행

다. 농업과 연계한 취약계층별 수혜자 중심의 식생활 플러스제도 운영

□ 사업(정책) 필요성

○ 빈부격차 심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가구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이 빠르게 확대, 영양 부족/잘못된 식생활에 의해 다수 취약계층이 위협받는 상황임.

○ 타 부처에서는 복지와 건강증진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생계비 형태 지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생계비 지원은 식품비이외 지출 비중이 높은 한계가 있음.

○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지원사업의 경우 농산물조달 실태를 알 수 없고 수혜자의 품질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우수 식재료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임.

□ 사업(정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의 기존 복지/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신선 농산물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새롭게 추진함.

○ 검토 대안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영양 부족 상태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족한 신선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구입 바우처를 별도 지급하는 방안
- 지역의 로컬푸드,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지원

5. 식품·외식산업의 내실있는 성장

5.1. 식품산업 성장 역량 강화

5.1.1. 기존과제의 개선

가. 중소식품기업 지원 및 역량 강화

○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에게 가공창업 역량향상, 제품개발, 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공동이용 농산물 가공 파일럿 플랜트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업인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기술, 창업, 컨설팅, 판매 및 소비까지 총 망라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협업적이고 포괄적 시스템의 차별적 지원 필요
- 2010년부터 구축된 시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시설의 안전장치 개선 및 HACCP 설치 지원

○ 중소식품기업 간 협력과 조직화를 유도하여 제품개발, 판로확대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식품기업 간 공동사업 지원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 일원화,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식품·외식기업 종합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원스탑(One Stop) 상담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 제작 및 발간

○ 컨설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사 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컨설팅사 관리 및 등급평가를 통해 컨설팅사 전문성 검증 및 중간검정 등 사업효율 제고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필요한 인력공급과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 인력 중계·지원 서비스 제공, 입주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참가 지원 등 방안 강구
- 입주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 우선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원료확보, 인력조달, 물류·유통, 수출지원(마케팅·브랜드화 포함)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함.
-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인근 지역 중심으로 로컬 생산조직을 육성하며, 간척지를 활용한 원료 생산기지 조성

다. 식품통계·정보 구축

○ 식품분야 조사·연구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식품산업 분석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계·정보분석 외 식품 연관산업 분석 등 정책지원 강화하는 등 전문기관 역할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 식품관련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정보의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종합포털(FIS)의 인지도 제고 및 정보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FIS에서 제공하는 식품산업 통계·정보를 활용한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모바일 앱 활용도 제고 등의 방안 강구

라. 식품전문인력 양성

○ 식품분야의 미래 유망 직업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전략 품목 육성과 연관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 식품 R&D 확대

○ 민간 R&D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성이 높은 식품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화·제품화 위주의 연구추진으로 식품산업 기반 및 소재·연관산업 육성의 투자가 미흡

○ 소규모 단기과제 중심이 아닌 중장기·대형과제 기획 및 상시기획 등을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 추진되어야 함.

- 대부분 1~3억 원, 연구기간 3년 이하의 소규모 단기과제로 기획되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에 어려움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R&D 투자가 타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므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함. 따라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허전략 지원, 세제 감면을 위한 기술 발굴 등 R&D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국가 식품산업정책과 연계한 R&D 투자전략 수립
- 민간의 R&D투자 및 기술역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공익적 연구개발, 고위험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 농림축산업과 식품산업,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
- 국산 농산물의 활용성 제고, 가공 소재 및 기자재 산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직·간접적 연계를 촉진하는 R&D에 중점 지원, 식품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원천·기반연구 강화

○ 연구개발 효율화 및 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R&D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식품 R&D 기획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R&D 관리를 효율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산업 R&D 생태계의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R&D 가치 창출체계 구축
- 식품 R&D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결과를 산업계로 중계 매개하는 컨설턴트 영역 지원 필요
- 식품 R&D 연구 참여자(학생 포함)의 창업시 인센티브 제공

5.1.2. 신규추진과제

가. 식품 전후방 연관산업 실태조사

□ 사업(정책) 필요성

○ 식품산업을 둘러싼 식품포장, 식품기계 등 식품전후방산업의 변화 발전은 미래식품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상품 유통이 세계화하고, 식품의 공급과 소비의 유통체인이 IT산업과 함께 발전함에 따라 식품포장 기술개발과 혁신은 급격히 성장
- 식품기계에 대한 식품산업의 다양한 수요, 식품기계 수입시장 증가 등으로 식품기계산업의 성장 잠재력 풍부

○ 식품포장, 식품기계 등 식품전후방 연관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초통계가 전무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차질을 초래함.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 생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식품산업 규모 추정 및 전통식품산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통식품산업 정부정책 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연례 산업현황 조사를 통해 전통식품 성장규모 파악
-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통해 일부 전통식품(된장, 고추장, 간장, 한과류, 떡 등)에 대하여 개별 업체의 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조사는 미실시

□ 사업(정책) 내용

○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 관련통계 기초조사
- 식품기계 및 포장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주요 조사내용은 업체 일반현황(인력, 매출액, R&D 등), 생산 및 유통현황, 정책지원여부, 애로사항 등

○ 전통식품산업 관련통계 기초조사
- 전통식품 생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식품산업 규모 추정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전통식품산업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 주요 조사내용은 업체현황, 원료수급현황, 생산 및 유통현황, 품질관리, 정책지원여부, 애로사항 등

나. 미래 전략 품목(고령친화형, 기능성, HMR, 4차 산업혁명 등)육성

□ 사업(정책) 필요성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 유망품목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로 간편식(HMR·도시락 등),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수요 증가
- 4차 산업 혁명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대

□ 사업(정책) 내용

○ 미래 전략 품목 육성 체계 확립
- 농업분야 미래 전략 품목 육성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농식품 분야 미래 전략 품목 육성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T/F를 설립이 필요
- 미래 전략 품목별로 산·학·관·연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
- 미래 식품 소비 행태 예측을 통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간의

공통적인 비전 공유로 효율 극대화

○ 미래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R&D 체계 구축
- 미래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R&D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산업화를 포함하는 R&BD 차원으로 접근 필요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R&D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부문의 R&D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R&D 자금의 일부를 생산자단체 및 기업체에 배분하여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R&D가 추진되도록 유도
- 한정된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 전략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목적 중심의 연구개발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소비 트렌드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현안 해결 R&D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 전략 품목 관련 농가 및 기업 육성
- 미래 전략 품목과 관련하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생산농가와 기타 투입재 및 관련 기업의 육성 필요
- R&D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들 농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자금 지원
- 미래 전략 품목 관련하여 농가 및 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마케팅 및 조직관리 등 경영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

○ 미래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마련
- 농업부문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접근 방법이 필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미래 전략 품목에 대한 보증 비율 확대가 필요하며,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5.2. 외식산업의 경영 안정

5.2.1. 기존 과제의 개선

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의 미반영, 엄격한 선정기준, 예산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체 외식업지구[1]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리체계 정비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함은 물론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한 민간참여 확산과 외식지구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전국에 산재한 외식업소들을 파악하여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도시형·농촌형 등의 유형별 관리·지원 안 마련
  - 외식업 지구 육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하여 선제적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 우수외식업지구 및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의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선정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정 및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정요건의 정량적 부분에 대한 충족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구단위

1 2012년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이전 지자체 조성 음식특화거리 150여 개소, 2012년 이후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한 전국 19개소의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의 발전가능성과 자발적 참여에 대한 평가 등도 고려

- 외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활용을 위하여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우수외식업지구의 지정요건), 제11조(우수외식업지구의 지정 신청), 제12조(우수외식업지구의 지정절차), 제13조(우수외식업지구 지정의 취소) 등 개선
- 우수 외식업자 지정 및 활용을 위하여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우수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제16조(우수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제17조(우수외식사업자 표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우수외식사업자 지정분야 및 세부기준)등 개선

나. 외식문화 선진화

○ 건전한 외식문화 및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식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거운 외식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하고 즐거운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식업 종사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소재로 다양한 캠페인 추진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등의 도입과 활용을 통하여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외식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65% 수준, 외식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외식업체 운영 및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외식업체 경영주 및 종사자들의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식 개선 및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푸드테크 활용 필요

다. 외식업 경영 안전망 확충

○ 외식산업의 영향력 제고 및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산업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고, 높은 창·폐업 등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외식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하여 경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외식업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관리, 주방설비 및 동선 구성, 서비스 제공 등 외식경영 표준 프로세스를 개발 및 외식업 경영주가 경영 상태를 진단·보완 할 수 있는 외식경영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영세한 외식업소의 경영진단, 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필요

○ 자금지원제도 개선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차임증감 청구권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 여러 형태의 기금이 있으나 기금 자체가 부족하거나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에 의해 이용자 미미
- 외식업체 경영 애로사항 중 식재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세액을 절감하는 방법 고려
-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또한 외식업 경영 애로 사항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임증감 청구권'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선 필요
  - 현행법 상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로 제한, 일부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매년 9%씩 임대료 인상
- 외식경영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한 외식경영 보험제 도입으로 외식업체의 경영 안전성 제고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외식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대를 통한 실무중심의 인재 양성, 경영주 역량 교육 강화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외식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65% 수준, 외식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외식업체 운영 및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외식업체 경영주 및 종사자들의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식 개선 및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푸드테크 활용 필요

라. 농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 강화

○ 상생협력을 통해 외식기업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왔으나, 홍보·판촉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실질적 연계 확대 노력은 미흡하다 할 수 있음.

○ 농산물 생산조직·식재료 공급업자·외식업자 간 파트너십 구축과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를 통하여 식재료 공급 효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농산물 공급 상황 및 외식업 트렌드 변화에 생산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 외식관련 협회 등과의 협력, 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통하여 식재료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과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 촉진 유도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법인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관리법 교육을 강화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내 농업-

외식, 식품-외식기업 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 기반 식재료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식재료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의 발굴 및 거래기회 확대를 통하여 외식기업 해외진출에 동반한 국내산 식재료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마.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 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의 지속적 운영과 효율성 개선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 및 이용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기관별로 산재한 해외진출 지원 정보 및 국가별 법률·행정 절차 , 현지 외식업 시장정보 및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5.2.2. 신규추진과제

가. IT 융·복합 외식업 육성 및 경영 로드맵 개발

○ 외식업계의 푸드테크(Food Tech) 활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배달, 음식점 정보공유, 조리법 공유, 맛집 추천, 주문·예약 등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국내 외식 관련 푸드테크(Food Tech) 산업의 방향을 외식산업 전 방위를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레스토랑 경영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 출현하고 있고, 마케팅 업무, 직무관련 업무, 운영 관련, 심지어 잔반 처리를 통한 비용 절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스마트한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IT 융·복합 외식업을 육성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의 선례를 바탕으로 외식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과 위생, 윤리문제 등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대비 '외식산업 푸드테크 TF(가칭)'을 구성하여 발생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예측과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해외 사례와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발전 방향 제시

○ 1인 소비, 가성비 중시 등 국민의 식생활·소비변화에 대응하여 외식업체의 경영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 로드맵 개발이 필요함.

- ICT를 활용한 매장관리 솔루션 및 신규고객 차별화 서비스 개발 지원
- 외식업체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케팅, 직무, 운영, 인사 관련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로드맵 개발

나. 식자재 및 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진단기술 개발

○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업체의 식자재 및 조리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영양사, 조리사 등 비전문가도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자재의 안전성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조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식자재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HACCP 인증 이외에 비전문가도 조리실에서 간편하게 식중독균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개발을 통하여 질병 및 바이러스 사전 예방 가능
- 음식뿐만 아니라 식재료, 원료농산물의 구매·배달과 조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기활용을 통하여 조리과정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5.3. 한식의 국내외 확산

5.3.1. 기존과제의 개선

○ 기존 '新식품정책'의 한식분야 과제 중 '한식종합포털' 개선, 한식진흥법 제정 및 한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식정책협의체 구성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개선·지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식포털을 '한식홍보종합포털'로 개선하는 계획은 달성되었으나, 정책 사업별로 정보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어 정보 제공·이용의 효율성과 효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도메인 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식포털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통합한 '한식 콘텐츠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식진흥법" 제정과 '장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법률 제정과 세계유산 등재라는 최종적인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임. 한식진흥과 한식 가치 제고 측면에서 과제의 필요와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이들 과제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장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식진흥법" 제정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식진흥정책을 일반 식품정책과 분리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함.
- '장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한식의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여론조성 및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성이 있음.

○ '한식정책협의체'는 한식 정책과 문화·관광 연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 10월 구성되었으며, 그간 한식 및 문화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는데 기여함. 한식정책협의체 구성 목적을 고려할 경우 향후에도 한식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추진 시 협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5.3.2. 신규추진과제

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 해외 한식당은 한식 세계화의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해외 한식당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해외 한식당이 영세 생계형으로 운영되며, 일식당 또는 중식당 등에서 한식을 병행하여 판매하거나 비전문한식조리사가 한식을 조리하고 있음. 한식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확보가 어려워 한식 고유의 맛을 살리지 못하는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도입 ② 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③ 한식당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 ④ 한식당협의체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등의 과제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식당의 품질을 높이고, 한식당 종사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전문성과 한식당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 운영 중인 해외 한식당이나 신규 진출 희망 한식당에 전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한식당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각국 주요도시별로 구성된 한식당협의체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 구매를 지원하여 해외 한식당이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양질의 한식메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한식 브랜드 가치 제고

○ 해외 진출 한식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다른 경쟁상대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식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개선·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 다른 국가 음식과 구별되는 한식만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식 브랜드의 인식·가치를 제고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홍보 및 경영 전략에 활용함으로써 한식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한식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로 ① 우수 한식 콘텐츠 개발·보급 ② 국가·규모별 한식홍보 행사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③ 해외 진출 희망 한식기업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식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고유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 한식 콘텐츠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발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식문화,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규모별 한식홍보 행사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단기 이벤트성의 홍보를 지양하고 국가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밖에 해외 진출 한식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한식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고 현지 시장에 적합한 체계적·구체적인 홍보 및 외식상품개발, 시설 · 설비 마련 및 경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5.4. 농업과 연계 강화

5.4.1. 기존 과제 개선

가. 가공용 종자개발 및 가공적성연구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가공적성, 고기능성 등 맞춤형 품종개발 촉진
- 건식제분 전용, 특수용도 및 가공용 초 다수확 벼 품종 개발
- 이모작 적응 식가공 맥류 및 용도 다양화 품종 개발
-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가공용 품종 개발

○ 가공적성 연구결과 DB화 및 공개
- 21개 품목의 가공적성 연구를 추진하고 통합DB를 구축
- 산업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협회 등 협조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속 추진

나. 식품 소재·반가공, 식재료 산업 육성

○ '17년까지 식품 소재·반가공·식재료센터 20개소 육성

○ 소비자 중심·미래 지향적 품목의 표준 개발로 업계 활용도 제고

다. 농업과 식품기업 상생협력 추진

○ 농업과 식품기업 상생협력 사례 발굴 확대

○ 식품·외식기업 원료농산물 수요 매칭시스템 구축
-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역 및 민간단위 자율적 협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협의회 구축·운영

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확대

○ 지역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마련
-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이드라인 시달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시·도와 함께 성과 평가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환류 방식으로 추진

○ 식품관련 향토산업과 연계지원 방안 마련

마. 전통주 산업 진흥

○ 찾아가는 양조장 육성 사업을 양조장 지정 방식이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재검토 후 변경 추진

5.4.2. 신규추진과제(가공·외식용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식품 기업이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저해하는 요인은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불안정(58.0%)과 원재료의 품질·규격·안전성 미흡(14.6%)으로 조사됨 (KREI, 2015)

○ 가공·외식용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약 거래를 안정화하는 방안과 가공용 농산물 생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가. 가공·외식용 식재료 계약거래 안정화사업 도입

□ 사업(정책) 필요성

○ 가공·외식용 농산물의 공급 및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켜 기업과 생산자(조직)간 계약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가 강화
- 현행 채소수급안정제도는 생식용 채소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주 목적으로 설계·운용

□ 사업(정책) 내용

○ 수요업체와 생산자(조직)간 사전 계약에 의해 거래 시, 갑작스런 가격·수급 변동에 대해 정부(지자체 포함)와 생산자조직의 일정 분담 비율에 의거하여 변동분을 부담하여 생산자(조직)의 리스크를 경감
- 생산자와 실수요자(식품가공업체, 외식산업 등) 간의 직접 계약거래뿐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산지 계약거래도 해당
- 중장기 계약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단기 1회성 거래는 제외
- 신선편이농산물(간이처리 채소)도 대상에 포함
- 농산물 종류(수급 중요도 기준 분류)에 따라 국가(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의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

나. 간척지 등을 활용한 가공·외식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사업(정책) 필요성

○ 가공·외식용 식재료로 적성이 높은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수입 대체 유도

○ 대규모의 효율적 생산·유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간 임대 및 투자를 활성함으로써 가성비 높은 가공 원료를 생산

□ **사업(정책) 내용**

○ 대규모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간척지 등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간척지 조성 면적 중 3만 여 ha가 농업적 이용이 가능
- 간척지 조성 후 상당히 경과되었으나 아직 농업적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용 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면 식재료 공급단가 인하와 일관화된 대량 공급이 가능
  • 간척지 조성 5년 후엔 곡물과 사료작물이, 10년경과 후엔 원예작물 재배 가능

○ 생산단지 등 특구 지역에서 기업의 농업법인 설립 규제 및 농지소유 관련 규제 완화

5.5.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출시장 진출의 지원여건 변화와 해외시장 진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농식품 수출주체의 경쟁력 및 역량 제고
-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와 전후방 산업 연계성 강화
- 농식품 수출시장 정보의 활용도 제고

5.5.1.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연계성 강화

○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은 함께 성장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해외시장에서의 한류 확산과 국내 IT 기술의 발전이 농식품 수출산업과 연계성이 높아질 경우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농식품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식품 전후방 연계산업을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 수출 개념을 농식품 상품 자체에서 농자재, 외식, 식품 포장재 등으로 확대
-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별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해외 수요자 입장에서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증대의 효율성을 제고

○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가공식품이나 HMR의 경우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가공, 포장, 저장기술 개발
- 식품포장재의 경우 수출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포장 디자인의 현지화 및 맞품형 포장디자인 육성, 식품패키징 센터의 수출지원 역할 강화 등
- 농기계의 경우 패키지화와 현지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협업체계에 기반한 수출 정보망 구축 등
- 종자는 수출지도 작성을 통한 종합적 수출전략 수립

5.5.2.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 수출주체의 경쟁력 강화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대신 수출주체의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출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을 발굴/지원
- 예) 수출품목별 수출농가/수출업체의 조직화 강화 지원사업, 해외시장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시스템 운영 등

○ 현재 수출창구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력약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품목별로 강력한 수출조직 운영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수출지원사업 지원창구를 품목별 수출/유통 대표조직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수출지원금을 품목별 수급/유통 안정화 기금 형태로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 농식품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지원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함. 기업성장 단계별 유형별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지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수출 성장 및 경쟁력제고가 어려워짐.
- 수출 국가별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유형의 수출지원/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
-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등 수요자 태도에 따라서 도입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로 구분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과 수출지원이 필요
- 수출 시작 단계에서는 품목별 홍보 자료 배포, 시범 판매, 시장정보 수집이 필요.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한 국가에는 유통채널 진입 노력 필요. 주력 시장이 포화시점에 이르는 경우 시장다변화 전략 추진

5.5.3.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미래전략 품목 발굴

○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수출 안정성 제고
-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요 정보 조사와 이를 활용한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수립함.
-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수출 차순위 국가와 수출 미개척시장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출 차순위 국가는 베트남, UAE 등 수출 1억 달러 이상 국가로(2016년 기준 11개 국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국가들의 수출액을 수출액 상위국가(일본, 중국, 미국) 수준으로 상향시킴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협업 ·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개척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함.
- 농식품 수출 미개척시장은 지역 권역별로 중앙아시아,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별로 국가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수출시장 개척국가를 확대
- 개척시장 거점 구축, 개척단 파견, 선도업체를 육성

○ 글로벌 사회 · 경제적 변화와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미래 유망 농식품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함.
-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시장 정보 조사와 수출업체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수출상품 개발에 활용함
- 수출 국가별로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R&D 및 수출상품 개발 지원

5.5.4.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강화

○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각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 DB화를 통해 업계별 정보 공유 확대
- 국가간 협상시 비관세장벽 이슈 제기 등 비관세장벽 정보의 주도적 활용

○ 비관세장벽 실태 조사와 개선을 위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을 높임.
- 2017년 시장 다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브라질, 인도 등 미개척 국가

의 비관세장벽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 수출업체 맞춤형 조사 지원 항목 확대 및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함.

-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업체 맞춤조사 수요 증대에 부응
- 조사내용은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의 가공 정도를 높인 핵심 정보 중심으로 전단하여 정보 활용도를 제고시킴

5.5.5. 글로벌 온·오프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 글로벌 비즈니스 수출 플랫폼 구축은 수출기업의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시장정보 제공이 필요함.

- 수출시장 정보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시장진출 가능성(관세 및 비관세장벽 고려), 현지 경쟁품목 정보, 소비자 정보, 판매 가능한 유통망 종류 및 연락처 등의 종합 정보 제공

○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농식품 및 농식품 연관산업에 대한 평면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시장정보-통관 및 검역-수출시장 유통망-소비자정보와 연계시켜서 시장 진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수출 국가별 전문가 자문단/컨설팅 기구를 운영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 전문무역상사, 해외 제3자 물류망 등 광범위한 판매망을 갖춘 기존 플랫폼 활용 확대

6. 국가푸드시스템의 체계화

6.1. 국가푸드시스템 구축 개념

6.1.1. 국가푸드시스템의 개념과 범위

○ 전통적으로 식품시스템은 '생산단계로부터 가공 및 분배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들'로 정의

○ 국가푸드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을 생산하여 식품으로 가공하고 유통시켜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사회·정치·문화·환경 및 과학기술적인 요인들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식품순환 과정을 의미
- 관련 경제 주체들의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행위와 환경 및 사회적 요인간의 상호 작용, 경제 행위의 식품안보, 사회적 후생, 환경 보호 및 생태 시스템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

○ 국가푸드시스템은 정부와 식품체인 내 경제주체들이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후생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의미
- 국민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유지와 식품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품이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접근가능하며, 안전하고 영양적인 음식이 공급되고 소비되는 상태
-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체계

6.1.2.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현재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식품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급변으로 식품관련 이슈들이 국가 경제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 지구온난화, 자연재난 빈도 증가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비만, 각종 성인병 초래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으로 간편 제품 소비 증가
  - 한국 성인 비만율: ('06) 28.7% → ('15) 32.4
-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식품 위기발생으로 수급불안 및 소비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 증가
  - '04년 불량 만두소, '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건

○ 식품관련 안전, 영양, 공급, 환경, 산업 부문간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통합계획(food plan) 등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

- 식품 관련 이슈는 환경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개별 활동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

○ 식품안전·영양, 식품 환경 및 산업 등 관련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산업 발전을 통괄하는 국가푸드시스템의 구축 필요

6.2. 국가푸드시스템 구축 방향

6.2.1. 국가단위의 푸드시스템 구축

○ 국가푸드시스템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한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 행복 증대"를 추구
  -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식품 안전성 확보, 소비자 안심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지향, 균형있는 영양 공급과 식문화 발전 등을 포괄하는 국가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

○ 식품의 생산·수급·안전·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국가단위의 기본계획 및 푸드정책 수립
  - 식품안보, 안전, 영양, 산업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 구축
  - 재정적인 지원, 기술개발, 식생활 교육,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범국민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필요

○ 국가푸드정책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영양 및 환경 등 식품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하여 국민후생 제고, 산업발전 등 식품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식량안보) 식량생산기반 확충, 해외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농산물 수급유통 개선 등
  - (식품안전) 정책 투명성 확보, 사전적 안전성 평가·관리, 신속한 대응 등
  - (국민영양) 식생활 지침·교육, 저소득층 지원, 국민영양 밸런스 시트 작성 등
  - (환경·질병) 농약·비료·자원순환, 음식 쓰레기 절감, 질병 관리 등

- (산업발전) 안전·산업진흥의 조화,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 유망분야 육성

○ 국가푸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 마련 및 기본 계획 수립
- 「국가식품기본법(가칭)」 제정으로 국가식품 기본계획(national food plan) 수립 의무화
- 인구유지에 필요한 식량공급, 영양 관리, 식품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품 종합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식품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식품정책 실행 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
- 「국가식품기본법」에 실행계획(지자체)을 포함시켜 지역단위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식품정책 수립 및 실행 근거 마련
-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식품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생산-유통-소비-순환 단계별 정책을 이행

○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 배분과 책임의 명확화
- 중앙정부 전담, 중앙·지자체 합의,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협력 방식을 구체화
-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이양

6.2.2. 민·관·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식품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상황 점검
- 식품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관련 부처 모두(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교육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참여

- 식품생산자 및 업계, 소비자 등 민간위원을 국가식품시스템이라는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
- 국가식품정책 분과위원회 설치: 총괄 / 공급 / 안전성 및 식생활영양/ 지속가능성
- 농식품의 생산, 수출입, 비축, 소비, 안전, 영양, 안보, 환경, 기후 등 식품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기타 이해관계자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식품정책의 파트너로 활용
- 민관의 참여 환경 조성 및 확대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 '식품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국가식품정책위원회의 위임사항 등 하부조직으로 활동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식품정책심의회는 중장기적인 국가푸드시스템 계획을 추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 · 소비자 등의 심의 · 자문을 구함

6.2.3. 지역단위 푸드시스템 체계화 지원

○ 지자체(시·군)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식품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역(시·군)별 '농식품 지역생산·소비 종합계획(5개년)' 수립
- 생산에서부터 폐기물관리까지 전영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지역 내 생산-소비 현황을 고려한 연간 기획생산 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생산-소비간 불균형 해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실행
-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계획 평가, 예산 확보, 생산·가공·유통 등

소관부문에 대한 현장 실행 지원

○ 지역차원에서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푸드시스템 구축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식품위원회 구성하여 지역의 생산-유통-소비-순환 단계별 정책을 총괄 조정·지원
- 지역 먹거리정책 기획에서부터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실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지역농산물의 생산·공급 체계 구축 지원
- 영세·고령농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직거래 등 안정적 판로 제공
- 중농·전업농은 전문화, 규모화를 통하여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유통을 추진하고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 추진
- APC 등 대형산지조직은 기존대로 규모화·전문화로 전국유통 강화
- 농업인 가공기업 활성화 및 지역 내 농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이용 유도
- 지역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가 조직화, 지역농정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농산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통경로 확충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지역 생산(자)과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경로 확충
- 먹거리 접근성 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비지 전통시장, 나들가게, 음식점 등 지역 골목상권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소비자 관심 제고 및 공공먹거리 확대
- 지역 먹거리 이용 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농업 현장체험 확대 및 친환경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 학교급식을 비롯한 관공서·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 푸드뱅크를 통한 농식품 기부 확대

참고 문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7. 「2016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농림축산식품부. 2014. 「신식품정책 추진계획」.
_____. 2015. 「2015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